

끝없는 정쟁에 韓 표류 위기… 與野 ‘경제 회복’ 힘 모아야

국정 흐름 전망

韓 경제 완만한 회복흐름 예상
선거 등 정치권 이슈 변수 전망
일각선 청와대 정국주도 의견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그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많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성장률이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제시하지만, 대외 환경과 구조적 제약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이다. 수출 회복과 내수 개선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치·정책 환경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정쟁이 가장 큰 리스크… 정치가 경제 변수로 떠오른 2026년

경제는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 주체들은 경기를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정책 방향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내수가 줄어들고 고용·투자 결정이 미뤄지는 이유다.

최근 한국 경제의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와 수출이 개선되면서 전기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비 1.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전 분기보다 높은 1.7%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제조업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수출이 증가했을 뿐, 제조업 전반의 생산과 체감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변수도 상존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 심리 회복 지연이 경제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로 ‘정치’가 지목되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쟁이 장기화되거나, 중장기 과제가 정치 일정에 따라 지연

된다면 불확실성은 더 높아진다. 정치적 갈등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이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책 결정에 정치일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선거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의 추진 원년으로 삼고 있다. 집권 2년차에 잠재성장률 제고 핵심 과제인 구조개혁의 물꼬를 터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장기 과제는 단기적인 선거 일정을 고려할 경우, 추진 동



지난 달 31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무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경제에서 나온다.

◆ 정책 불확실성과 정쟁 구조, 경기 회복의 제약 되지 않아야

올해 정부의 주된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아왔다.

일단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중장기 과제를 의제로 내세웠을 때 정쟁의 소재로 전락할 수 있다.

집권 초반 국정 동력과 여당의 의석수가 뒷받침 될 때, 6대 구조개혁을 이뤄내

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이다. 야당과의 갈등이 부각될수록, 구조개혁의 길은 점점 험난해진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등 갈등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 동력이 높은 2년차, 청와대가 정국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나, 외환위기 극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비상경제 대책회의 등 청와대가 주도해 국가 경제의 큰 맥을 잡아왔던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지방선거의 해… ‘내란청산·야권재편’ 변수

李 정부 집권 2년차… 첫 시험대 “압도적 승리구도 나오기 어려울 것”

6·3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 혼란 극복과 민생·경제 정상화를 기치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리는 선거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하니문 기간 특수를 누려 지난 지방선거의 대패를 설욕할지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적극적으로 구애해 지방권력을 수성할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은 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움직일 변수가 많아 선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고 봐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떨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외교 문제, 한중 관계나 남북 관계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변수들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과 간다면 (정부·여당) 하니문 이펙트를 볼 것”이라며 “야권이 전원이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약 경제가 안 좋게 되거나 외교에서 큰 실책이 터지거나, 혹은 정부·여당에서 큰 실책이 나오면 그때는 민주당이 이점을 누리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권 초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하니문 기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짧아져서 지방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선도 있었다.

신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하니문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현 정부

가 유리하지만, 하니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취임하고 나서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요새 기준으로 그것이 과연 하니문 기간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SNS의 발달로 시민들이 금방 사람들이 정권의 문제점을 간파를 한다. 정권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각종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야당보다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도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이준한 교수는 장·한·석 연대론을 두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극적으로 뒀다고 해도 선거용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의명분이나 설득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선거용 야합’,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세 사람의 연대보다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여부가 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하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층은 기본적으로 집 토끼여서 보수 진영을 이탈할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 밖에) 놔두고 선거를 치르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접전 지역에서 개혁신당 후보자들이 나와서 3%만 가져간다고 하면 박빙 지역에선 국민의힘의 완패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수도권 같은 곳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든 통합이든 이를 이뤄내느냐가 구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부터 이어지는 비상계엄 가담자 관련 재판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모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두고 시민의 피로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에서 악발이 떨어질까봐 종합특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일텐데, 내란 이슈를 오래 끌어도 내란 피로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내란 관련 선고나 종합특검 추진에도) 선거 막판으로 가게 되면 회귀를 한다. 어느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구도는 짜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는 결집하고, 중도표는 양쪽으로 갈릴 것이고, 결국 1~2%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중도 표심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느냐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층엔 워낙 관심이 없이 행보를 하니 문제인데, 개혁신당까지 놔두고 극우처럼 해서 선거 치르면 완패”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라든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영입한 것처럼 중도 보수 성향 인재들을 영입해서 아예 선거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제1차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동철, 문정복, 이진태, 이성윤, 강득구 최고위원 후보.

/뉴시스

與, 지도부 공백 메우기… ‘관리형 인재’ 초점

민주당 11일 최고위원·원내대표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이번 달 11일에 선출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인 3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보궐선거와 집권여당 원내를 이끌 원내대표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에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일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신임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유동철·문정복·이진태·이성윤·강득구(기호 순) 후보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이른바 진정청태(진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모양새인데, 진청계 후보는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출마했고 친명계 후보는 유동철·이진태·강득구 후보가 출마해 2대 3의 구도를 보이고 있다.

최고위원과 함께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신임 원내대표에 누가 선출될 지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의 사퇴에 따라 오는 11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임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잔여 임기 4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원내대표직에 입후보할 유인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구)이 일찍이 선언했다.

진성준 의원은 당헌과 당규에 보궐선거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규정이 없어, 이번엔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한번 더 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긋고 ‘관리형 원내대표’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 의원 외에도 백혜련(3선·경기 수원시)·한병도(3선·전북 익산시)·박정 의원(3선·경기 파주시)이 출마를 결정하거나 막판 고심 중이어서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최대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보궐선거가 잔여 임기 4개월을 수행하는 원내대표를 뽑는 만큼, 진청·친명 계파색을 빼고 ‘관리형’ 원내대표 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태홍 기자